

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신중'... 영수회담 이후 결정할 수도

총리 후보, 권영세·주호영·김한길
비서실장 거론 후보, 친윤 '비판'
박영선·양정철 설에 '비선 의혹'
금주 대통령실서 이재명 회동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이후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열흘이 지난 21일 현재, 윤 대통령은 아직 후임 인선을 결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 "지금은 신속보다도 신중한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물론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길어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총리와 이 실장은 22대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곧바로 후임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총선이 끝난 지 열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4월학생혁명기념탑에서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 넘었음에도 인사 발표는 계속 미뤄지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거대 야당과 대화를 할 만한 인물을 찾기 위함으로 보인다. 선부르게 인사를 단행할 경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이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적의 인물을 찾는 셈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이날 "(오늘) 인사 발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선 총리 후보군으로 는 국민의힘 소속의 권영세·주호영 의

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준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비서실장 인선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무감각과 대내외 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비서실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야권으로부터 '국정 쇄신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거론된 인물들이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친윤 색채가 비교적 옅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정현 전 의원 등도 거론됐지만 야권에서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설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여론이 더 험악해지고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까지 불거졌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영선·양정철 발탁설'에 대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빼내 가서 민주당 상임고문을 시키겠다'면 OK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홍 시장은 이를 응하겠는가, 민주당원들은 찬성하겠는가"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 파괴 공작이라고 길길이 날뛰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이후에 인선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5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 주중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통화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 대표는 그간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은 과거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한 바는 없었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만큼, 이제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한 만큼,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 논의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전대를 변경 '신경전'

영남당 한계 드러나... '수도권 지도부' 필요

윤상현 "혁신 성격 비대위 돼야"
당원 50%, 여론조사 50% 변경 주장
권영진 "당원 100% 하는 게 맞아"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전당대회의 선거 룰 변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출 방식을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등 '민심'과 '당심'을 섞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원투표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박도 많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6월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윤대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차기 지도부를 빠르게 선출하기 위해서는 윤 권한대행을 비대위 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당선된 이들을 중심으로 윤 권한대행 추대에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영남권 인사인데다 총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윤 권한대행이 실무형 비대위를 꾸려 전면에 나서는 것은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총선 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해왔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켜야 하지만, 특검 때문에 현재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면 혁신위나 TF를 발

리 만들어야 한다"면서 "유권자를 실망시킨 것에 대한 반성과 자성부터 해야 한다. 관리형이나 실무형 비대위가 아닌 혁신 성격의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도 이 자리에서 "냉철한 복기가 먼저 돼야 한다.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면 총선 참패가 금방 잊힌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영남당'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며, '수도권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체 지역구 의석의 48%를 차지하는 수도권(122석)에서 단 19석 밖에 얻지 못하면서, 수도권 민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윤상현 의원의 세미나에 참석한 당내 인사와 전문가들은 총선 패배 복구를 위한 백서(평가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영남권 의원들의 '2선 후퇴'를 주장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힘'인가. 나는 '영남의힘'이라고 본다"고 비판했고, 박성민 정치권 설령 민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영남 의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김재섭 당선자도 "영남의 정서를 기준으로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운 것 같다"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 민심을 잡아야 하는데 지도부만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을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하려면 전당대회 룰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존 규칙대로 '당원투표 100%'를 적용하면 영남권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기존에는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였지만, 2023년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규칙대로 바뀌었다. 그 결과 당권을 잡은 것이 영남권 의원인 김기현 전 대표다.

이에 당내 수도권 인사들은 '당원투표 100%'인 현재의 전당대회 룰로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더 커질 것이라 주장한다. 일부는 이 비율을 50%까지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를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자제하는 편이다. 총선 패배의 책임론이 거세지며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일부 영남권 인사들은 이에 대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권영진 당선인(대구 달서병)은 "선거 때만 되면 영남에 와서 표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을 한다. 참 경우도 없고 모욕적"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선거권을 갖는 잔치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당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 차기 당권주자로 비윤(비윤석열)계이자 수도권 중진인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예진 기자

野, 차기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쟁 '치열'

국회의장, 추미애·조정식 도전 전망
원내대표엔 박찬대·서영교 등 후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재명 당 대표가 올해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중진 의원들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거로 행보를 바꾸는 모양새다.

먼저, 관례상 임기 2년의 국회의장은 원내1당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선출해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최고득표자가 당선되게끔 해냈다.

국회의장 후보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다. 추 의원은 연고가 없는 경기 하남갑에 도전해 신승을 거두면서 6선 고지에 올랐다. 추 당선인은 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현 정부와 화끈하게 붙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 떠오른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라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추 당선인 이외에도 당내 최다선인 조정식 의원도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의원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음에도 당 사무총장 직을 내려놓으며 국회의장 도전설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사임에 대한 이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히며 "향후 22대 총선의 민의가 국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 의원

도록 윤석열 정권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살리겠다"며 "그리고 무너진 헌법정신과 의회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 서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과 조 의원 이외에도 원로급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김태년 전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힘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빈자리도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도전할 전망이다.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식 도전을 선언한 박 최고위원 이외에도 역시 친이재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으로 선거를 이끈 김민석 의원, 당 수석 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의 김영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

/박태홍 기자 pth285@